

##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(법무부 · 행자부 · 인권위)

### □ 과제목표

-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,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,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,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

### □ 주요내용

- (인권 보호) '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·조직 등 확대
  -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, 인권기본법 제정, 군인권 보호관 신설,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
- (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) '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,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
  -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·개정,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·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, '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
- (개인정보 보호 강화) '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,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
- (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)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, 시민사회 지원조직으로서 '시민사회발전위원회'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
- (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) '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,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·지자체 책무 강화
  -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
### □ 기대효과

- 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·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
- 기부·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